

다스부터 추궁... 실소유주 입증 치열한 논리 대결

MB 검찰 소환... 법리 공방 시작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인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핵심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60억원 대납 의혹을 예로 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보다 이를 먼저 묻는 것은 선수가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내준 소송비용이 뇌물로 인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흐름상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비자금, 조세포탈, 소송비 대납 등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다스 실소유 의혹)이 전제되면 조사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의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인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자 진술

경영진·친척 "MB가 주인" 진술

비자금·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적용 대선자금 등 뇌물 사전수뢰죄 검토

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성동조선, ABC 상사,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자금 등 뇌물을 받은 의혹 부분 역시 치열한 법리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생인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자금수수 행위의 뒤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될 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게 된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친형의 형사처벌까지 함께 피하도록 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이 전 대통령 조사는 그간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과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45·27기) 3차장이 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한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감사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중

심을 잡고 다른 변호사들이 각자 중점적으로 맡은 부분이 나올 때 번갈아 조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짧은 면담을 거쳤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에 대한 고

려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고, 이 전 대통령도 저희를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靑, 문무일·조국 충돌 양상에 "이전 조정 과정"

청와대는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한바탕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반기를 든 모양새라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찾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에서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위한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청와대 입장과 배치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조 수석은 지난 1월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데다 제한 없는 직접수사, 경찰 수사 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의견 수렴 반영 여부에 대해 "검찰청은 삼급지휘기관인 법무부 검찰개혁위에 독자적인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일시에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폐자동차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17) 아상블라주

아상블라주(asssemblage)는 '수집, 집합, 조합, 집적'의 뜻을 지닌 프랑스어이다. 또한 '폐품이나 일상용품 등 여러 물체를 모아 3차원적 입체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미술 용어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신사실주의자 페르난데스 아르망(1928~)은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파리 근교에 세워져 있는 아르망의 환경조형물 '장기주차' (1982년 작)는 59대의 자동차와 1600톤의 시멘트로 제작한 것으로 버려진 자동차를 차곡차곡 쌓아올려 거대한 폐차장 같은 느낌을 준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이 조형물이 세워졌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순수예술 범주에서 벗어난 도발적이고 노골적인 소재가 '있는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과거의 사실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주의가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상징으로서 자동차가 갖는 성공과 풍요의 세속적 의미는 현대인들을 열광하게 했지만 그로 인한 산업폐기물 역시 우리 시대 한 단면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에서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오브제로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이미지를 설치미술의 소재로 활용하는



아르망 작 '장기주차'

작가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 시대 중요한 산물이어서 일 것이다.

예술가에게는 영감의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동차 산업이 광주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온다.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으로서 그런 지 GM군산공장 폐쇄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의 슬기로운 해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자동차 1대에 2만 여개의 부품이 소요되므로 부품업체를 비롯해서 정비, 유통, 금융, 보험, 세금, 운수업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 후폭풍 또한 거세게 일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정체기획실장·미술사박사>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여·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정기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항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정기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횡단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근 (52)

경남 고성 안평항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횡단리새우 2.2g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